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2. 11.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17.

운영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고명욱 의원 외 10명(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영빈, 김정희, 김기열, 서민우, 남현주, 황국주, 최홍린)
- 발의일자: 2022. 11. 4.
- 회부일자: 2022. 11. 4.
- 검토기간: 2022. 11. 4. ~ 11. 10.

## 2.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현행 규정 삭제(현행 제4조~제4조의5, 제10조 및 제15조 삭제)
-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별지 서식 삭제(안 제10조의3제2호, 안 제13조제2항, 현행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12호 삭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현행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18조제3항)

##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제19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5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2. 11. 4. ~ 11. 15.)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22. 5. 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개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으며,

\* 7개 조항: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 또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라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하고 ‘전가(轉嫁\*)’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표기를 병행하였으며,

\* 전가(轉嫁): 허물이나 책임(責任) 따위를 남에게 넘겨 씌움(한자사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같은 영 제25조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령에 규정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관련 법령과 일원화하고,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참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 참고

##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연번	행위기준	개정 여부	연번	행위기준	개정 여부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처리	유지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유지
2	•특혜의 배제	유지	2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유지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유지	3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유지
4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유지	4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유지
5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유지	5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유지
6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유지	6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유지
7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유지	7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유지
8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유지	8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유지
9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유지	9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유지
10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유지	10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유지
11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유지	11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유지
12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유지	12	•영리행위의 신고	유지
1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유지	13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유지
1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유지	14	•성희롱 금지	유지
15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유지	15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16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16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17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17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삭제
18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삭제	18	•가족 채용 제한	삭제
19	•가족 채용 제한	삭제	19	•수익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	•수익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제
21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21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삭제
22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제			
23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제			

※ 「공무원 행동강령」 상 23개 행위기준 중 8개 규정 삭제(15개 규정 유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상 21개 행위기준 중 7개 규정 삭제(14개 규정 유지)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구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1조제3항제1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1”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2”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 제>		
<p>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u>안건심의 등</u>”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p> <p>1. <u>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2. <u>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3. <u>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4. <u>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5. <u>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u></p> <p>6. <u>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u></p>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삭 제>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구의 집행기관 및 구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구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삭 제>

<삭 제>

<삭 제>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생략)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설>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② (생략)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1. (현행과 같음)

2. -----  
-----  
-----  
--전가(轉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구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  
단체

4. ----- 제3호 각목  
의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 7. (생략)

④ ~ ⑥ (생략)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 ⑧ (생략)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1. -----  
-----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1-----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  
-----  
-----  
-----  
-----  
-----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2-----  
-----.

②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  
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  
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  
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  
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  
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  
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  
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  
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  
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별표1] (생략)

[별표2]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생략)

[별지 제5호서식] (생략)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자문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관 계 법 령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이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구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2.>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5.>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